

단속 완화 탓?... 잇단 오토바이 사망사고

광산구서 무면허 운전 20대
북구서 20대 배달원 숨져
집중단속 20일간 2791건 적발
도심 굉음·곡예 운전 여전
시민들 "집중 단속 재개해야"



20일 오후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이 광주시 광산구 한 사거리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한 이륜차 운전자를 멈춰 세우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과속·신호 위반,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승용차 사이로 펼쳐지는 곡예 운전과 신호를 위반하는 무법 질주로 시민들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경찰이 예고했던 '집중단속' 이 끝나자마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교통 지도·점검이 지나치게 경직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인도와 차도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오토바이들로 애꿎은 승용차 운전자들과 시민들만 피해를 겪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토바이 집중단속' (4월 27일~5월 17일)을 종료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광주지역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4건이나 잇따르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당시 교통경찰 뿐 아니라

기동대, 지구대·파출소, 경찰오토바이까지 동원했고 주말·공휴일에도 위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속 초기만 해도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와 인도와 승용차 사이를 마구 헤집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듯처럼 보였다.

20일간의 집중 단속 기간 적발한 건수만 2791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2건을 적발한 것에 견줘 무려 19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신호위반(407건)이 가장 많았고 중앙선침범(64건), 안전위반운전(162건) 등

의 순이었다. 헬멧조차 쓰지 않고 돌아다니다 적발된 경우는 1951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한시간이면 10건 넘게 적발될 정도"라고 했다.

그 뿐이었다. 경찰이 인력 부족과 다른 업무 등을 내세워 집중 단속이 마무리되지 않고는 다시 터져나왔다.

20일 새벽 2시30분께 20대 배달원 A(24)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교차로를 지나다 도로면 연석을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19일에도 밤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장동 부영 1차 아파트 앞길에서 A(22)씨가 500cc급 오토바이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도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면허도 없이 친구 소유의 오토바

이를 몰고 커브길을 지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에도 남구 백운고가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법 행위도 여전했다. 시민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오토바이와 굉음을 내는 배달 오토바이는 강남도 도심과 충장로 일대에서 목격됐다.

광산경찰이 이날 실시한 단속에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신호 위반을 한 채로 질주하던 운전자 10명이 적발됐다.

단속도 수월하지 않았다. 이날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단속에 걸린 3명은 보란 듯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고 지난 12일에는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속 중 이던 경찰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단속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과 다른 업무를 내세워 중단한 경찰의 집중 단속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단속 등 현장단속에는 많은 인원과 힘이 든다"면서 "연간 계획을 세워놓고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2020년 3월 31일 기준 등록 이륜차는 3만9987대로 지난해 보다 370대가 증가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 할 예정이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보험사기범 항소심서 되레 형량 늘어난 이유는 법정 도주 시도 등 반성 기미 없어 엄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4배나 늘었다. 법정에서 도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 점 등이 반영됐다. 법조계 분석이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개월)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광주지역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명목으로 42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수차례에 걸쳐 190여만원 상당을 받아 행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법정에서 관련 재판을 받다 징역 2개월을 선고받자 곧바로 변호인석 책상을 뛰어넘어 법정 뒤쪽 법관 출입구로 도주하다 붙잡혔다.

A씨는 이후 도주미수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감형 요소인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도주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A씨의 도주 전에 선고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징역 2개월)의 '1심 형(刑)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도주미수 혐의에 대한 A씨 항소 이유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 검찰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도주를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이미 수차례의 처벌 전력을 반영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징역 2개월'로 마무리될 수 있던 형량이 늘어나 8개월(징역 4개월, 징역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셈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40년전 그날처럼...차량시위 재현

'민주기사의 날 행사' 개최

1980년 5월 20일, 금남로를 가득 메웠던 택시의 행렬이 40년 만에 재현됐다.

20일 '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사)5·18구속부상자회와 전국민주택시연합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당시 차량 시위를 재현하는 '민주기사의 날' 행사를 옛 무등경기장 인근 도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개최했다.

'민주기사의 날'은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살육 만행에 분노한 광주운수 노동자들이 버스와의

택시기사들이 차량을 이끌고 전남도청으로 행진, 계엄군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포니차 4대와 택시 50여 대 등 차량 70여 대가 참여 태극기와 제40주년 5·18기념행사 슬로건을 새긴 깃발을 달고 참여했다.

정두진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은 "차량시위 재현을 통해 택시노동자들의 항쟁 정신을 되새기고자 한다"며 "전국의 택시노동자들과 연대해 5·18민중항쟁을 전국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소 유지 미흡했나...한 재판부서 무죄 잇따라

재판에 넘긴 형사 사건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1심 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 사건들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소(公訴·재판 회부)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진도군모마트 앞에서 땅 문제로 시비돼 마트 인근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마트 출입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민사적 분쟁 외에 피해자 의사를 제압·혼란케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형사 3부는 또 지난 2014년 20여차례에 걸쳐 530일이 넘는 임원치료를 받았으며 6개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해 1억11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B(59)씨에 대해 원심으로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로는 B씨가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고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한 3건의 병역법 사건까지 포함하면 형사 3부가 이날 오전 선고한 10개 사건 중 5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30대 여성, 차 몰고 경찰서 들진 왜?

"폭력 피해 상담 경찰관이 너무 불친절해 화났다"

불친절한 경찰의 상담 태도에 불만을 품은 30대 여성이 자신의 수갑차를 몰고 경찰서로 돌진해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20일 경찰서 입구 차단봉을 들이받은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여·3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남부경찰서로 돌진, 경찰서 앞에 설치된 차단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에서 내린 뒤에도 문을 못 이긴 듯 자신의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와이퍼까지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폭력 피해자로, 지난 17일 밤 상담을 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너무 불친절해 화가 났다"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앞 차단봉을 들이받은 차량.

경찰은 A씨가 피해자로 상담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발원추정을 하

는 과정에서 응대하는 경찰 태도가 불친절하다고 생각돼 이날 다시 경찰서를 찾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사건 응대 과정에서 경찰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

Meritz, Hanhwa, MG, Heungkuk, Samsung, AIG, KB, DB, AXA, BNP Paribas, The K, TMA logos.